

2023년 8월 30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귀하

참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용: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

김도읍 위원장께

지난 70년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여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베트남전과 1970년 해군 방송선 I-2 호정 나포사건, 1955년부터 1987년 사이에 60건이 넘는 어선 나포와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최소 6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을 계속 억류 중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을 포함한 수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실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올 1월 4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2월 3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건, 즉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¹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²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1, 2년이 더 지났음에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은 한국이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상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이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8월 30일 기준)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탈북자동지회(NKD)

¹ 대한민국 국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안 제 2107371호, 2021. 1. 14.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E1S0R1F0T8B1V6Z2W9P1X1B2Z7C7

² 대한민국 국회,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안 제 2115792호, 2022. 5. 30. 제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B2M0R4W2K1E1J7M2S9C4O4X2T9D1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